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⑤ 재산소득, 상위 1%가 ‘싹쓸이’

2016.11.18. | 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 |
sijeong11@naver.com

1990년대 중후반 이래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에서 발생한 소득 불평등 심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가장 부유한 최상위 1%에게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로소득 상위 10% 내에서도 최상위 1% 또는 0.1%라고 할 수 있는 연봉 수억, 수십억의 CEO와 임원진 등 경영자들에게로 근로소득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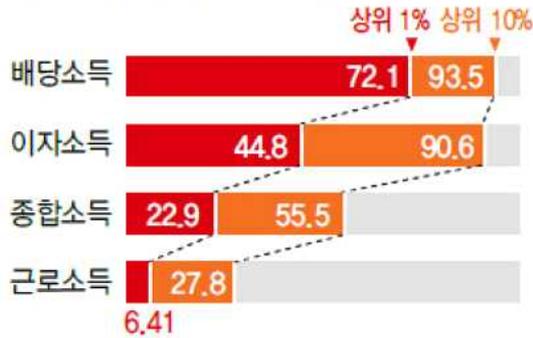
장하성과 홍성민 등 야권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연봉 5천~7천만원을 버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소득 상위 10% 또는 20%에서 재산소득이 미미하다는 사실만을 언급할 뿐, 대한민국 1% 부자들의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 인구의 재산소득은 연평균 1억 원이며 그들의 가계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런데 상위 1%의 부자들의 개인·가계 소득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역으로 한국경제에서 발생하는 재산소득을 대부분 그들이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재산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만큼 나머지 인구에서 재산소득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당연하다. 연봉 5천~1억원 사이에 있는 소득 상위 10% 또는 20%의 직장인들에서 근로소득이 압도적이며 재산소득은 미미한 비중만을 차지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다.

부유한 1~2%가 싹쓸이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가장 부유한 상위 1%가 재산소득을 싹쓸이하여 가져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득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다. 먼저 배당소득부터 보자. 배당소득은 주식보유자에게 분배되는 재산소득으로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건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건 그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우리 국세청 소득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1. 상위 1%와 상위 10% 소득점유율



자료 :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4년 10월 8일.

2014년 10월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살펴보면, 배당소득을 받은 국내 주식투자자는 2012년에 882만5천여 명, 즉 전 국민의 17%이다. 그 중 주식을 많이 가진 상위 1%인 8만8천명, 즉 전 국민의 0.17%가 총 배당소득 11조3천억 원 중 무려 72.1%인 8조1천7백억 원을 가져갔다. (최상위 0.17%로의 배당소득 집중도 72.1). 그 다음, 그 1%를 뺀 9%에 해당하는 주식투자자 79만4천명(전 국민의 1.6%)에 해당하는 이들이 총 배당소득의 21.4%를 가져갔다. 결국 배당소득 상위 10%(5천2백만 전 국민의 약 1.8%인 88만명)이 전체 주식배당소득의 대부분인 93.4%를 가져간 것이다. (상위 1.8%로의 배당소득 집중도 9.34). 그리고 주식투자자의 90%에 해당하는 794만3천명 즉 전 국민의 15.9%에게는 겨우 나머지 배당소득 6.5% 즉 7천3백억 원이 배당되었을 뿐이다.

요약하면, 전 국민의 1.8%에 해당하는 88만 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93.4%를 가져갔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한국의 1% 부자들과 그 가족이다. 그리고 나머지 배당소득 6.5%를 전 국민의 15.9%에 해당하는 794만3천명이 가져갔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대기업과 공기업, 은행과 보험사에서,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과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다. 이들이 바로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 또는 20% 그룹의 대부분 구성원이다.

전 국민 중 가장 부유한 1~2%가 재산소득의 90% 이상을 싹쓸이하는 현상은 이자소득에서도 조금 완화된 형태지만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자소득은 예금 및 적금과 채권(국채와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다. 어린이를 제외한 누구나 은행에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은행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인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이들은 전국민의 92%인 4,78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금과 적금은 소액인 까닭에 예금자들은 매년 통장에 찍혀 있는 이자소득과 이자소득세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수억원 이상의 은행 예금-적금과 국채,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이자소득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며 그것에 과세

되는 이자소득세도 상당하다.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의 이자소득 총액은 24조9천억 원이다. 그런데 이자소득자들 중 가장 부유한 1%인 47만8천5백명 또는 전 국민의 0.9%가 그 이자소득의 44.8%인 11조1천4백억을 가져갔다. 1인당 평균 약 2천330만 원을 가져간 것이다. 이것은 전 국민 중 가장 부유한 최상위 0.9%가 평균 국민보다 50배 (=44.8/0.9)많은 이자소득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위 1%를 뺀 나머지 9%의 이자소득자들인 430만명 또는 전 국민의 8.3%가 2012년 이자소득 총액의 45.8%인 11조4천억 원을 가져갔다. 1인당 평균 약 265만원이다. 이자소득 상위 1%와 9%를 합칠 때, 상위 10%의 이자소득자들 또는 전국민의 9%가 2012년 이자소득 전체의 90.6%를 가져갔다. 나머지 이자소득 9.4%를 전국민의 91%가 가져갔다.

이렇듯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대표되는 재산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중 가장 부유한 최상위 1~2% 부유층으로의 매우 집중도가 높아서 평범한 서민들 재산소득의 50배에 달한다.** 그만큼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

위 국세청 자료를 인용하여 최재성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대표적인 재산소득으로 초고소득층이 그 소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근로소득 격차가 큰 상태에서 재산소득의 쏠림 현상까지 가중돼 소득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소수에게 몰려 있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겨레 2014년 10월 8일자). 칭찬할만하며 올바른 지적이다.

한편,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관한 최재성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대해 자유주의 진보 측 논객들은 혹시나 그런 주장이 “한국경제는 아직 전근대적인 중상주의 봉건적 자본주의” 라는 그들의 고유한 테제를 훼손시킬까를 우려했다. 예컨대 인터넷 언론인 <프레스리안>의 이승선 기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최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일각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토마 피케티의 이론이 한국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태세다.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세습 자본주의가 이미 한국에서 꿈쩍할 정도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로 [그 보도자료를]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자본주의>라는 신간을 통해 ‘한국에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을 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는 주장을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각종 인터뷰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외국의 수입이론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해서 비판하지 말고, 한국의 현실이 정말 어떤지 알고서 비판하자’ 면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겪지도 못할 정도로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거치지 못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년센스’ 라고 강조했다” (프레스리안 2014년 10월 9일자).

내가 보기에는 이승선 기자와 장하성 교수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넌센스를 말하고 있다. 게다가 최재성 의원실인 인용한 국세청 자료에는 배당 및 이자소득보다 훨씬 중요한 또 다른 재산소득(자본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빠져있는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위의 수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상가와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세(사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최재성 의원실이 보도한 국세청 자료에는 그 자료가 빠져 있다. 더구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제도상 미비로 인해 아직 임대소득세가 부과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국세청에 그것에 관한 아무 자료가 없다.

재산소득 불평등이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심해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벌어졌다. 한편으론 비정규직과 외주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론 대기업 CEO와 임원·경영자들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위 0.1~1% 근로소득자의 연봉이 과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부유한 상위 1~2%의 재산소득은 평범한 서민들 재산소득의 50배에 달한다. 50배의 불평등이다. 이에 비한다면 그나마 근로소득 불평등이 덜 심하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이용한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2014년 10월 8일)를 보면, **가장 돈을 잘 버는 근로소득자 상위 1%는 총근로소득 422조4천446억 원의 6.41%인 27조787억 원을 가져갔다.**¹⁾ 즉 최상위 1%는 평균적인 근로소득자보다 6.41배를 더 벌어난다. 6.41배의 불평등이다. 그리고 근로소득 상위 10%(최상위 1%도 포함)는 그 27.8%인 117조4396억 원을 가져갔으므로 그 10% 상위 근로소득자들은 평균적인 근로소득의 2.78배를 벌어난다.

1) 최재성 의원실에서 2012년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이 자료에서 모든 수치는 근로소득세를 납세한 근로소득자들 기준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 상위 1%, 10%, 90% 등의 숫자와 그들의 총근로소득 27조원, 117조원, 422조원 등의 숫자 역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자들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근로소득자 1,618만7천여 명 중 740만 명(45.7%)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기획재정부 전수조사). 따라서 이들은 위 수치에서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늘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표 1. 2014년 연간 근로소득 분포

	인원수 (명)	분위 소득 구간	분위 소득 합계 (백만원)	비중 (%)	1인당 평균소득 (천원)
1분위	1,564,932	0~400만원	2,905,610	0.57%	1,857
2분위	1,580,136	400~950만원	10,642,892	2.07%	6,735
3분위	1,707,164	950~1,400만원	20,254,436	3.94%	11,864
4분위	1,604,034	1,400~1,800만원	25,690,498	5.00%	16,016
5분위	1,661,864	1,800~2,300만원	33,979,091	6.62%	20,446
6분위	1,559,937	2,300~2,900만원	40,342,026	7.86%	25,861
7분위	1,614,097	2,900~3,700만원	53,018,120	10.32%	32,847
8분위	1,638,473	3,700~4,850만원	69,447,436	13.52%	42,385
9분위	1,630,796	4,850~6,700만원	92,748,715	18.06%	56,873
10분위(상위 10%)	1,626,214	6,700만원 이상	164,518,758	32.04%	101,167
상위 10-5%	860,054	6,700~8,500만원	63,392,486	12.34%	73,708
상위 5-1%	653,138	8,500~1억3,500만원	66,123,408	12.88%	101,240
상위 1%	178,830	1억3500만원 이상	39,379,157	7.67%	220,204
상위 1-0.5%	91,228	1억3,500~1억7천만원	13,106,079	2.55%	143,663
상위 0.5-0.1%	71,612	1억7천~3억5천만원	15,678,730	3.05%	218,940
상위 0.1%	15,990	3억5천만원 이상	10,594,349	2.06%	662,561
상위 0.1-0.05%	8,418	3억5천만원~4억9천만원	3,388,545	0.66%	402,536
상위 0.05-0.01%	7,572	4억9천만 원 이상	7,205,804	1.40%	951,638
상위 0.01%	1,868	10억원 이상	3,505,069	0.68%	1,876,375
합계	16,187,647		513,547,581	100.00%	

자료 : 윤호중 의원실 보도자료, 2015년 9월 9일.

근로소득 불평등이 그나마 재산소득 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하다는 사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2015년 9월 국세청이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자 1,618만7천여 명(여기서는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 소득자도 포함)의 평균 연간 근로소득은 3,172만5천원(월 264만 원) 가량이다.²⁾

이 자료를 보면 1천618만7647명의 근로소득자 중 가장 돈 잘 버는 최상위 1%는 최소한 연봉 1억3천5백만원(근로소득세 납세 전)을 벌은 17만8830명이며 이들은 2014년 총 근로소득 513조5476억 원의 7.67%인 39조3791억원을 가져갔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억2천20만원인데, 이것은 이들 최상위 1% 근로소득자들의 연봉이 평균적인 근로소득자 연봉 3천172만5천원의 7.67배임을 의미한다. 7.67배의 불평등이다. 물론 이 역시 심한 소득 불평등이며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심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소득 불평등에 비해서는 정도가 덜하다.

2) 윤호중 의원실에서 2014년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이 자료의 수치는 근로소득세를 납세하지 않은 이들(근로소득세 면제자)도 포함하여 1,618만7천여 명의 모든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2014년 10월 8일)와는 차이가 있다.

다른 한편, 최소 연봉 6천700만원 이상을 버는 이들이 바로 근로소득 상위 10%인 169만6천214명인데, 이들이 2014년 총 근로소득 513조5476억 원의 32.04%를 가져갔다. 즉 이들 근로소득 상위 10%(10분위)는 평균적인 근로소득자 연봉 3천172만 5천원의 3.2배인 연봉 1억116만7천원을 벌었다. 3.2배의 불평등이다.

최상위 1%와 나머지 99% 사이의 '넘사벽'

그런데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돈 잘 버는 상위 10% 구간 내에서의 차이도 매우 심하며 유별나게 가장 부유한 1%로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상위 10% 범주 내에서 소득이 꾸준히 높아지는데 하지만 가장 부유한 최상위 1% 구간에서는 그것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이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 범주에서 관찰된다.

2012년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각 범주별로 100개의 소득구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최재성 의원실의 자료를 보자. (표 2와 표 3 참조).

표 2. 최상위 1%에 집중되는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구분	종합소득 100분위(2012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2012년 귀속)				
	인원 (명)	종합소득금액 (백만원)	총종합소득 대비%	누적%	1인당 금액 (백만원)	인원 (명)	총급여 (백만원)	총급여 대비%	누적%	1인당 금액 (백만원)
합계	4,352,929	126,023,230	100%	100%	28.95	10,612,293	422,371,491	100.00%	100.00%	39.80
1%	43,529	28,854,822	22.90%	22.90%	662.89	106,122	27,078,652	6.41%	6.41%	255.17
2%	43,529	8,884,146	7.05%	29.95%	204.10	106,123	13,687,280	3.24%	9.65%	128.98
3%	43,529	6,351,336	5.04%	34.99%	145.91	106,123	11,943,604	2.83%	12.48%	112.54
4%	43,529	5,114,596	4.06%	39.05%	117.50	106,123	10,947,279	2.59%	15.07%	103.16
5%	43,529	4,383,573	3.48%	42.53%	100.70	106,123	10,215,601	2.42%	17.49%	96.26
6%	43,529	3,887,932	3.09%	45.61%	89.32	106,123	9,619,628	2.28%	19.77%	90.65
7%	43,529	3,510,592	2.79%	48.40%	80.65	106,123	9,097,022	2.15%	21.92%	85.72
8%	43,529	3,201,548	2.54%	50.94%	73.55	106,123	8,660,385	2.05%	23.97%	81.61
9%	43,529	2,948,430	2.34%	53.28%	67.73	106,123	8,294,132	1.96%	25.94%	78.16
10%	43,529	2,735,046	2.17%	55.45%	62.83	106,123	7,986,577	1.89%	27.83%	75.26

자료: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4년 9월9일.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구간 내에서 매 1% 씩 소득 분위가 높아질 때마다 연 근로소득이 19%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하지만 최상위 1%의 경우 갑자기 2배로 증가한다. 즉 근로소득 상위 2%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소득이 1억2천 898억 원인데 반해 상위 1%의 그것은 2억5천517억 원으로 갑자기 98%나 증가한다. 우리는 앞의 2장에서 김낙년 교수가 사용한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료를 인용하면

서, 1998년 이후 그나마 총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속도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 상위 10%인데,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최상위 0.1~1% 근로소득자들로의 소득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종합소득의 경우 최상위 1%의 특권적 소득 지위가 더욱 심하다. 종합소득 상위 2%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억410만원인데 반해 최상위 1%의 그것은 6억6천289억 원이다. 갑자기 225% 즉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1%의 특권적 지위가 관찰되는데, 이자소득이 많을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1인당 연간 이자소득이 상위 2%에서 상위 1%로 높아질 때는 갑자기 연 716만원에서 2천228만 원으로 3배 이상, 즉 225%나 늘어난다.

표 3. 최상위 1%에 집중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구분	배당소득 100분위(2012년 귀속)					이자소득 100분위(2012년 귀속)				
	소득자 (명)	소득금액 (백만원)	전체금액 대비%	누적%	1인당 금액 (백만원)	소득자	소득금액	전체금액 대비%	누적%	1인당 금액 (백만원)
합계	8,825,442	11,328,761	100.00%	100.00%	1.28	47,858,412	24,897,085	100.00%	100.00%	0.52
1%	88,254	8,172,039	72.14%	72.14%	92.60	478,584	11,141,859	44.75%	44.75%	23.28
2%	88,254	814,845	7.19%	79.33%	9.23	478,584	3,426,003	13.76%	58.51%	7.16
3%	88,255	447,006	3.95%	83.27%	5.06	478,584	2,137,601	8.59%	67.10%	4.47
4%	88,254	301,528	2.66%	85.94%	3.42	478,584	1,518,593	6.10%	73.20%	3.17
5%	88,255	225,871	1.99%	87.93%	2.56	478,584	1,156,099	4.64%	77.84%	2.42
6%	88,254	178,032	1.57%	89.50%	2.02	478,584	917,820	3.69%	81.53%	1.92
7%	88,254	144,293	1.27%	90.77%	1.63	478,584	738,559	2.97%	84.49%	1.54
8%	88,255	119,517	1.05%	91.83%	1.35	478,584	610,025	2.45%	86.94%	1.27
9%	88,254	100,696	0.89%	92.72%	1.14	478,585	502,898	2.02%	88.96%	1.05
10%	88,255	85,932	0.76%	93.48%	0.97	478,584	420,526	1.69%	90.65%	0.88

자료: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4년 9월9일.

최상위 1%의 특권적 소득 지위가 가장 심한 것은 주식배당소득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한 바 있는데,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1인당 배당소득은 상위 2%에서 상위 1%로 높아질 때 갑자기 연 923만원에서 9천260만원으로 거의 10배나 증가한다.

이처럼 모든 소득 유형에서 가장 부유한 1%와 그 다음의 2% 사이에 상당한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나라 경제에 하나의 특권적인 1%의 소득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넉넉하게 사는 상위 10% 내에서도 가장 잘사는 1%의 갑부들과 그렇지 못한 9% 사이에는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격차와 장벽이 존재한다. 이른바 ‘넘사벽’ 이 존재하는 것이다.

10 대 90의 대결이나 1 대 99의 대결이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상위 0.1~1%의 부자들과 혼맥과 학연 등 각종 인맥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 자체 대한민국 최고 부유층인 특권적 귀족계급의 일부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펼치는 경제사회정책이 대다수 서민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이 대다수인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전 국민의 1%인 최상위 백만장자, 억만장자 부자들에게는 재산소득 즉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야권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야당의 경제관을 대표하는 장하성 같은 경제학자들은 재산(부) 및 재산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모든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이자 본질이라고 말한다. 근로소득 상위 10% 또는 20%와 나머지 90% 또는 80%간의 대립이 불평등의 본질이며, 그것은 결국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궁극적 원인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기업구조 즉 재벌그룹 및 대기업 체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재벌그룹 및 대기업 위주의 중상주의적 또는 봉건적 기업구조를 약화 또는 해체하지 않는 한,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한국경제가 여전히 자본주의 초기 즉 중상주의 또는 봉건적 자본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시대착오적 분석을 제시한다.

1990년대 중후반 이래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에서 발생한 소득 불평등 심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가장 부유한 최상위 1%에게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로소득 상위 10% 내에서도 최상위 1% 또는 0.1%라고 할 수 있는 연봉 수억, 수십억의 CEO와 임원진 등 경영자들에게로 근로소득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장하성 등 일부 야권 경제학자들은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눈을 감아 버린다. 한국 자본주의가 자본 축적의 초기 단계는커녕 오히려 자본 축적의 말기 증상인 카지노 자본주의, rentier capitalism을 향해 내달리면서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이 경제와 기업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1월 18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몰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青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홀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쥐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종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정승일
사회적 경제	10/24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새사연 노동연구팀
경제	1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 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정승일
경제	11/7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김영석
경제	11/1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④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정승일
복지	11/14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최정은
경제	11/18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⑤ 재산소득, 상위 1%가 '싹쓸이'	정승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